

# 계엄군 막은 시민·야당 신속 대응이 민주주의 지켜냈다

계엄선포서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시민들 밤새도록 국회 주변 둘러싸  
군인 옷자락 붙잡고 작전중단 요청  
헬기 동원 계엄군 280여명 국회 진입  
보좌진 등과 대치 유혈사태는 없어  
의원 190명 2시간만에 국회 모여



3일 오후 11시께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분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과정에는 '투철한 시민의식'과 야당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진 뒤 주변 시민들은 국회로 앞다퉈 달려와 군인들의 추가 분회의장 진입을 막아냈고, 예산 심의 등으로 자택과 국회 주변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도 총동원령 속에서 신속하게 분회의장을 채워나갔다.

또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도 시민과 국회의원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고, 일부는 탄창을 채우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작전'으로 대처해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의 비극은 재현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식=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1시를 시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경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280여명이 진입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흐른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

도 CC-TV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우려했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계엄반대를 외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입장할 때마다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일부 시민은 국회 외곽에 모습을 보인 군인들의 옷자락을 잡은 채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의 기세에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차분히 대응하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한때 군인들과 의원 보좌진들간 격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혼식을 앞둔 민주당의 한 보좌진이 얼굴에 9바늘을 분합해야 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의원 보좌진과 함께 국회사무처 직원과 야당 관계자를 역시 군인의 분회의장 진입을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일부는 군인들에게 "분회의장 진입은 민주주의의 말살이다"라며 차분한 어조로 달래기도 했다.

계엄군도 무리한 진입 대신, 절제된 언행으로 필요 이상의 마찰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도 차분한 대응과 함께 물러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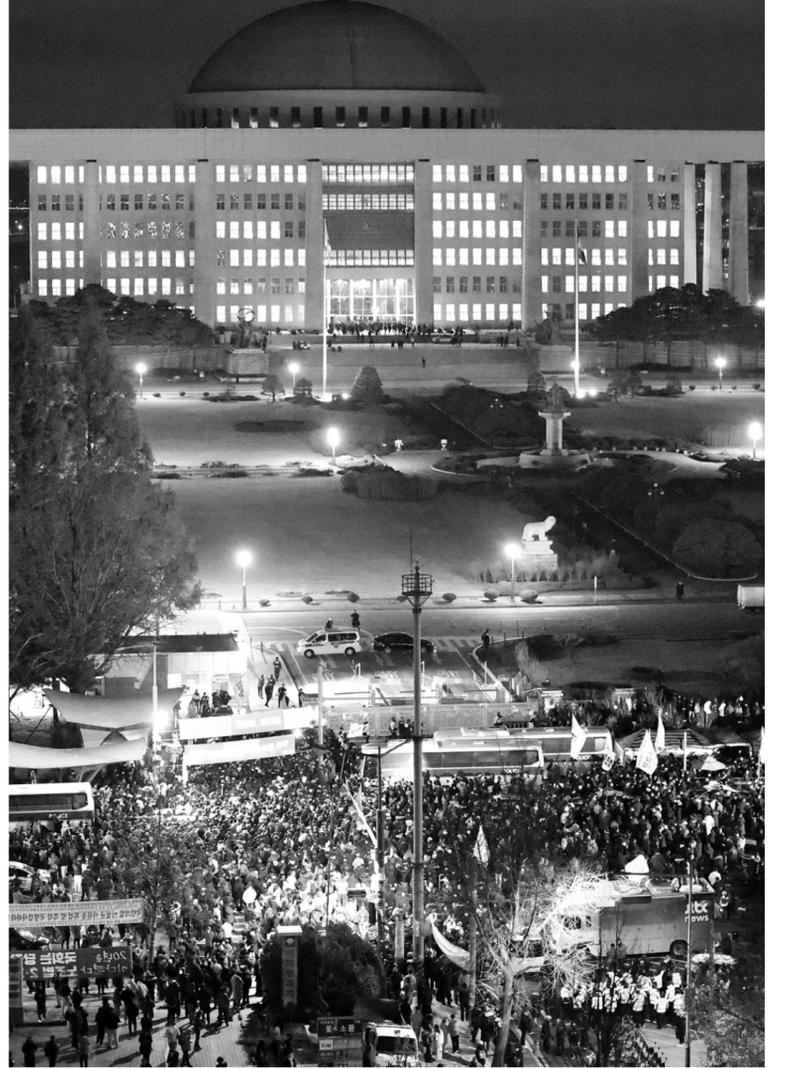
◇67세 의장부터 의원들 국회 담 넘어 계엄 저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 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만든 과정에 야당의 역할도 컸다. 군인에 의해 국회는 출입이 통제됐지만 의원들은 1m 남짓의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올해 67세인 우원식 의장도 담장을 넘어 4일 0시 30분께 분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분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또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 분회의장으로 달려가는 등 광주·전남지역 18명의 국회의원도 계엄해제를 위해 사투를 펼쳤다.

결국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뒤 계엄사를 철수했다.

한편 이날 전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 190명이 불과 2시간 여만에 국회로 모이고, 의원 보좌관 다수가 계엄군과 공동 대처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내년 국비 예산 심의를 위해 대다수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서울 내 국회 주변 등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윤 탈당' 요구에도... 결론 못낸 국회 비상 의원총회

내각 총사퇴·국방 해임 의견 모아  
계엄사태 후속책 계파 갈등 양상

국회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

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며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의 경우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총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 건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오후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가 의총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도 옆에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 상황을 저허가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외 진보3당,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고소

국방장관·육참총장 등 3명

원의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